
주요국 예산안 - 독일

2021. 11.

연구책임자

윤성주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경호 경제재정분석팀장

공동연구원

김진아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4
2. 예산기조	7
3. 예산안 주요 내용	9
가. 재정수입	9
나. 재정지출	12
4. 주요 재정정책	18
가. 재정건전화 계획 등	18
나. 기후변화 대응	22
다. 주요 투자 정책	24

독일 개황1)

□ FY2022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출처 : 연방 재무부, 경제에너지부

Finanzplan des Bundes 2021 bis 2025, 2021.8

Finanzbericht 2022, 2021.8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

Frühjahrsprojektion 2021, 2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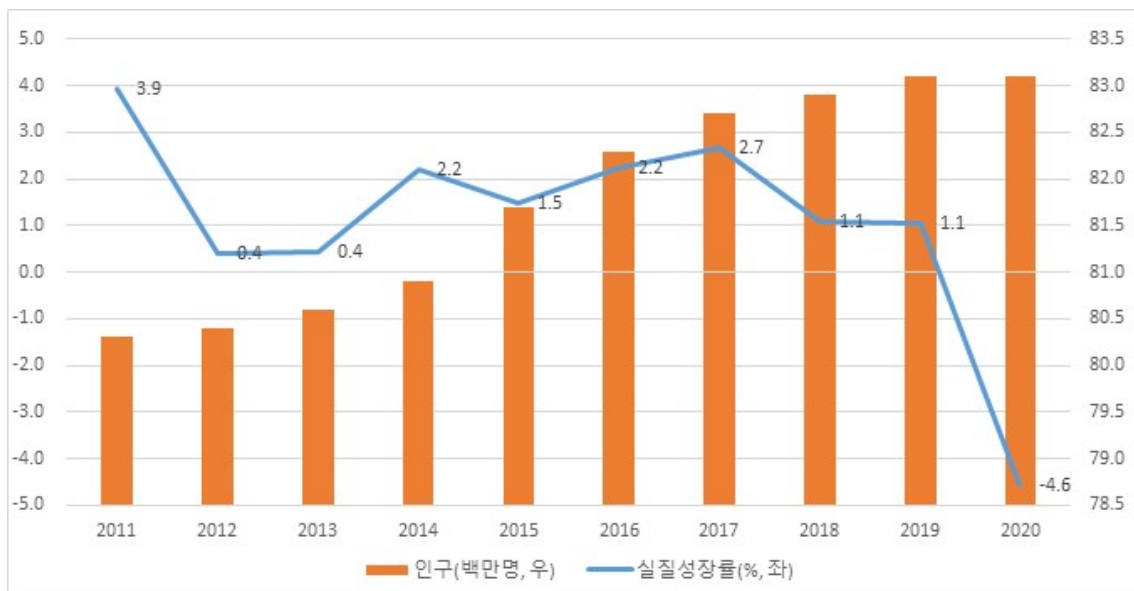
Herbstprojektion 2021, 2021.10

□ 환율: 1유로 = 약 1,345.99원(2020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20년 경상 GDP 3조 3,676억유로(2020년 기준, OECD)

□ 인구 : 8,316만명(2020년 기준, OECD)

□ GDP 및 인구 추이 :



자료 : OECD.Stat, 2021.10.6. 추출(<https://stats.oecd.org/>)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1.10.6. 추출, <https://ecos.bok.or.kr/>) 기준;
경제규모, 수출입의 대GDP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2021.10.6.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요 약>

□ 경제·재정전망

- (경제성장) 2021년 봄 경제전망(Frühjahrsprojektion)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팬데믹 상황 개선,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수입 회복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코로나19 지원 조치 만료 등으로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9.1% 감소할 전망이며,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7.25%를 기록한 후 2025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미래를 위한 투자 강화, 기후변화, 국제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 연간 약 510억 유로 규모의 투자지출 유지 전망

□ 예산안

- (재정수입) 2022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4,430억유로로 전망되며, 조세수입 3,152억유로, 신규차입 997억유로로 편성
- (재정지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2021년 대비 19.1% 감소한 4,430억유로로 전망되며, 주로 팬데믹 대응 및 단기 경제안정화 조치 만료 등에 기인

□ 주요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독일 정부는 2023년부터 연간 약 20억유로의 상환을 시작으로 초과차입금 상환 계획 수립
- (기후보호)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추가 80억유로를 배정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주요투자정책) 2022년 연방예산 투자지출은 약 518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교통, 주택, 교육·연구, 디지털화, 환경보호, 개발원조 등에 우선 투자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1.1.19.	FY2020 잠정결산 발표
2021.1.27.	2021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21.3.24.	FY2022 예산안 및 FY2021-2025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결의
2021.3.24	FY2021 추경예산안 결의
2021.4.21.	2021 안정화프로그램 채택
2021.5.12.	제160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21.4.28.	2021년 봄경제전망 발표
2021.6.23.	FY2022 예산안 및 FY2021-2025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2021.10.15.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발표

1. 경제·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독일 경제는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고 관련 제한조치가 감소함에 따라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됨
 - (성장률) 2020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하였으며, 연방정부의 봄 경제전망²⁾에서 2021년 3.5%, 2022년 3.6%의 경제성장률을 전망
 - 2023~2025년까지 독일 경제는 매년 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소비) 민간소비지출은 2021년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인해 완만한 성장률(0.8%)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강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5.5% 증가할 전망
 - (수출·수입) 2022년 글로벌 산업 활동 및 세계 무역 회복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4.5%)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회복과 해외여행 증가로 수입 또한 상당히 증가(7.5%)할 것으로 기대
 - (노동시장) 독일의 조업단축수당³⁾은 실업증가를 완화시켜 빠른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단기간 근로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물가) 2021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3%, 2022년에는 1.4% 상승할 전망
 - (위험)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은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조치의 불확실성, 지속적인 공산품 부족으로 인한 산업 동력 둔화 등이 있으며, 예상보다 강한 따라잡기(catch-up) 효과(특히, 민간소비 부문), 대외 무역의 강력한 회복 등은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참고

3) 조업단축수당(단축근로보조금)(Kurzarbeitergeld)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해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기업 내 일상적인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 감축 시 고용인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노동청의 지원 하에 상실된 고용인원의 순 임금의 60% 또는 67%(최소 자녀 1명인 경우)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출처: 코트라)

<표 1> 2020~2022 경제 주요지표 전망

(단위: %)

	2020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4.9	3.5	3.6
가계최종소비	-6.1	0.8	5.5
정부최종소비	3.3	5.2	0.3
총고정자본형성	-3.1	3.5	3.6
설비	-12.1	7.5	5.5
건설	1.9	1.4	2.8
내수	-4.2	2.5	3.8
수출	-9.4	9.2	4.5
수입	-8.5	7.8	5.0
고용인구(백만명)	44.8	44.7	45.0
실업인구(백만명)	2.7	2.6	2.4

자료: 경제에너지부, Frühjahrsprojektion 2021

<참고 1> 2021년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 (경제성장) 연방정부는 가을 경제전망에서 2021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2.6% (봄 전망대비 0.9%p 하향조정), 2022년 4.1%, 2023년 1.6%로 독일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경제성장률은 공급망 및 운송 병목 현상과 전 세계의 높은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여 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 민간소비가출은 현재 경제회복의 원동력이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부문도 크게 개선
 - 한편 2021년 3,4분기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중간재 부족현상으로 인해 산업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나, 운송 병목현상이 해소되면 2022년에는 캐치업 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0년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2021년 말-2022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물가상승률 전망: 2021년 3%, 2022년 2.2%, 2023년 1.7%)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전망

- (지출) 2022년 재정지출은 4,430억유로로 전년대비 1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투자) 연방정부는 기록적인 투자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연간 약 51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
 - 주요 투자항목으로 교육 및 연구, 디지털·교통 인프라, 기후친화적 경제구조조정 및 특별 기금인 에너지·기후기금, 디지털 인프라, 보육 확대 등에 초점
 - 기후보호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800억 유로 이상을 확보한 것에 더하여 2022년 기후보호프로그램에 추가 80억 유로 자금 배정
- (일반정부 재정수지) 최근 수정 중기재정계획(2021.10)⁴⁾⁵⁾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 안정화프로그램(2021.4)⁶⁾ 대비 개선된 -7.25%로 전망되며, 2022년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3.25%를 기록 한 후 2025년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신규차입) 2022년 신규차입 규모는 기본수치(Eckwerte) 발표 당시보다 182억유로 증가하여 997억유로가 될 전망

□ 국가채무 전망

- 수정 중기계획에 따르면 독일의 마스트리히트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는

4)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information-material-issued-by-the-federal-government/german-draft-budgetary-plan-2022-1968494>, 검색일자: 2021.10.21.

5)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예산계획(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독일은 6월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현재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여 제출함

6) 안정화프로그램(Stabilitaetsprogramm 2021, 2021.4.)에 따르면, 2021년 독일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9%로 전망되었으나, 수입부문 개선 및 경제의 긍정적 전망 등의 요인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72.25%로 기존 전망(2021.4)인 74.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2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67.25%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8.7%로 전망(75.25%)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막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은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

<표 2> FY2022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단위: 억유로, %)

	2021	2022	중기재정계획		
			2023	2024	2025
재정지출	5,477	4,430	4,034	4,076	4,083
전년대비 증감률(%)	+24.0	-19.1	-8.9	+1.0	+0.2
투자	593	518	509	508	508
재정수입	5,477	4,430	4,034	4,076	4,083
조세수입	2,840	3,152	3,329	3,464	3,592
신규차입	2,402	997	54	120	118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21 bis 2025, 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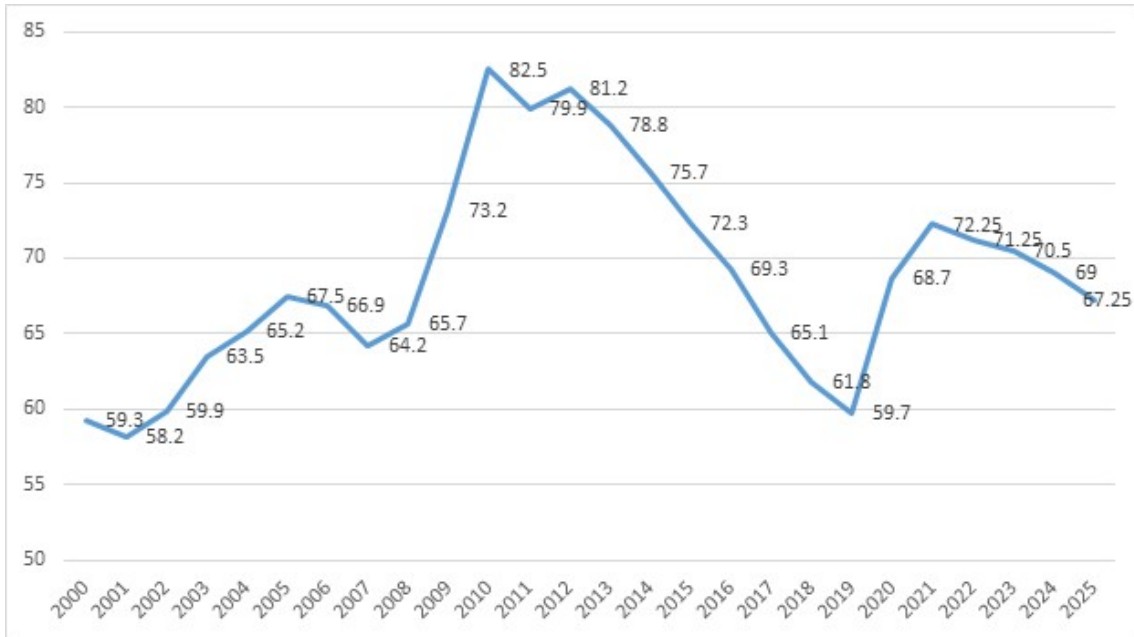
<표 3> FY2021~2025 주요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정부 재정수지	-4.3	-7.25	-3.25	-1.5	-0.5	0
구조적 재정수지	-1.8	-6	-3.25	-1.5	-0.25	0
국가채무	68.7	72.25	71.25	70.5	69.0	67.25

자료: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15.

[그림 1] 독일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2. 2021~2025년 전망 자료: 2021.10.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자료: 연방재부무, Gesamtwirtschaftliche Ausgangslage und finanzpolitische Konzeption, 2021.6.23.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예산기조

- (우선순위) 2022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 강화, 기후변화, 국제적 책임에 우선순위 설정
 - (미래투자 강화) 독일은 중장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팬데믹 이후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패키지를 통한 투자 강화를 강조
 - 2022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디지털화, 인공지능, 양자기술, 5G/6G 통신기술 추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며, 중앙집권적이었던 투자를 부처에 분배하기로 합의
 - (기후변화) 독일은 기후보호 및 경제부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800억유로를 투입하였으며,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80억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을 배정
 - 독일 내각은 2021.5.12.일 기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 조치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독일 기후협약(Klimapakt Deutschland)을 통과시켜 기후보호를 위한 도전에 박차를 가함
 - (국제적 책임) 독일은 2022년 경제개발협력부(BMZ), 외무부(AA),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예산에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국제 기후보호를 위해 24억유로 배정
 - 추가적으로 국제적 코로나 위기 대응 및 기후 보호 조치에 20억유로 자금 배정 예정
- (재정지출) 연방지출은 2022년 4,430억유로에서 2023년 4,034억유로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4,083억유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2-2023년 지출감소는 팬데믹 대응 및 단기 경제안정화를 위한 조치 만료에 기인

- (투자) 2022년 연방정부 투자지출은 518억유로에 달하며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연간 약 510억유로 규모를 유지할 전망
 - 이는 위기이전(2019년 기준)의 연간 381억유로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투자지출 범위는 운송(도로, 철도, 수로), 교육 및 연구, 디지털 인프라, 경제의 기후 친화적 구조조정 등으로 다양하며, 운송 관련 투자가 2022년 192억유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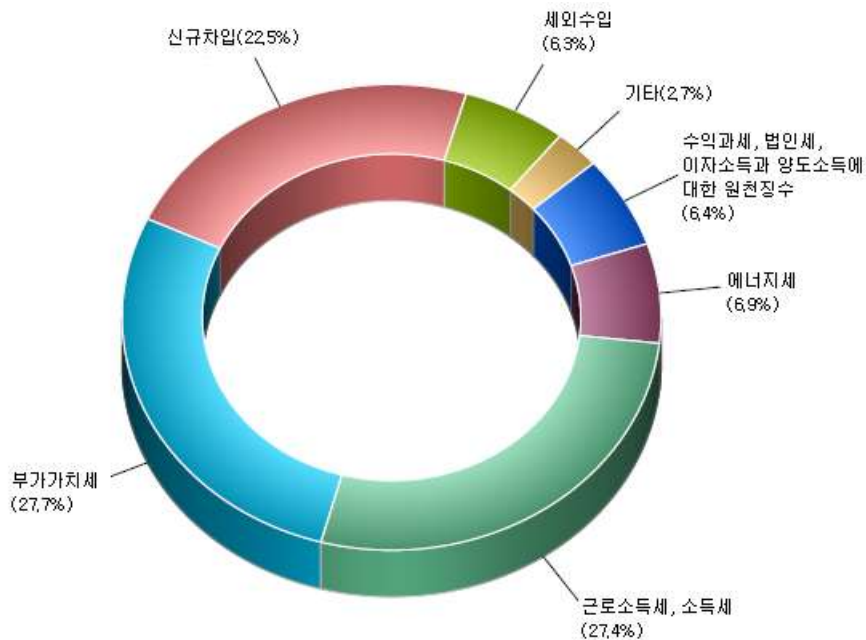
- (특별기금) 독일 연방정부는 특별기금으로 중요한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재원을 제공하며, 2022년 연방 특별기금의 투자지출은 약194억유로 규모
 - 에너지·기후 기금: 에너지·기후 기금에 속한 2030 기후보호 프로그램과 미래패키지를 통한 환경·기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지출은 2022~2025 기간 동안 약 930억유로 규모로 예상됨
 - 디지털 인프라 기금: 독일 교육시스템 디지털화(DigitalPact Schule)를 위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기가비트 및 이동전화 네트워크 확장을 직접 지원하는데 사용
 - 보육: 연방주의 보육확대, 초등 종일돌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지출

3.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재정수입

- 2022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약 4,430억유로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조세수입 비중이 약 71%(약 3,152억유로)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 2022년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152억유로로 전망되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두드러짐(<표 4> 참고)
 - (세외수입) 2022년 세외수입은 281억유로 규모이며,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
 - (신규차입) 2021년 2,402억유로였던 연방예산안의 신규차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997억유로 규모로 편성

[그림 2] 2022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p.63

<표 4> 2021~2025년 연방 조세수입 및 신규차입 계획

(단위 : 억유로)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근로소득세(Lohnsteuer)	898	952	1,006	4,062	1,120
소득세(veranlagter Einkommensteuer)	260	259	279	303	323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 않는 수익과세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07	109	113	123	126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33	33	33	33	34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141	144	155	167	174
부가가치세(Steuern vom Umsatz)	1,154	1,285	1,356	1,393	1,433
영업세 이전금액(Gewerbesteuerumlage)	18	19	21	22	23
연방세(Bundessteuern) ¹⁾	986	1,001	1,013	1,024	1,035
EU기금(EU-Finanzierung)	-377	-370	-372	-383	-399
지방분권기금(Regionalisierungsmittel)	-93	-94	-98	-99	-101
보충교부금(Ergänzungszuweisungen)	-92	-94	-99	-104	-109
자동차세 손실보전금(Kompensation Kfz-Steuer)	-90	-90	-90	-90	-90
재정안정보조금(Konsolidierungshilfen)	-8	-8	-8	-8	-8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및 현재 조세추세에 따른 조정분	-14	6	20	21	30
총 조세수입(Steuereinnahmen)	2,924	3,152	3,329	3,464	3,592
신규차입(Nettokreditaufnahme)	2,402	997	54	120	118

주: 1) 연방세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으로 보험세, 담배세, 커피세, 증류주세, 와인세, 샴페인세, 주세, 전기세, 에너지세, 자동차세, 항공세, 연대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소비세입(송원근, 2018)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Tabelle 14, 16. 일부발췌., p.72, p.76

<참고 2> 연방재무부, 제 160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⁷⁾ 결과⁸⁾

□ (세입) 2021년 총 세입은 7,735억유로로 전년대비 4.6%, 2022년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의 긍정적 경제발전에 따른 영향으로 '24년까지 매년 4%대 증가율이 기대됨

<표 5>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방정부	2,831 (-14.0)	2,938 (3.8)	3,146 (7.1)	3,309 (5.2)	3,442 (4.0)	3,562 (3.5)
주정부	3,163 (-2.5)	3,246 (2.6)	3,395 (4.6)	3,524 (3.8)	3,679 (4.4)	3,810 (3.6)
기초자치단체	1,075 (-6.4)	1,125 (4.7)	1,160 (3.1)	1,229 (6.0)	1,298 (5.6)	1,353 (4.3)
EU ²⁾	328 (6.0)	427 (30.1)	420 (-1.5)	423 (0.5)	435 (2.9)	451 (3.7)
총 세입	7,397 (-7.5)	7,735 (4.6)	8,121 (5.0)	8,484 (4.5)	8,854 (4.4)	9,175 (3.6)

주: 1)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21~'25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재무부, Press Aktuelles 2021.5.12.

7) 독일의 세수추계는 통상 5월, 11월 두 차례 발표하며, 세수추계 작업반은 간사역할을 맡은 연방재무부 외에 연방 경제에너지부, 5대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함

8) 독일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1.5.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5/2021-05-12-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1.5.13.

나. 재정지출

-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팬데믹 대응 및 단기 경제안정화를 위한 조치 만료 등으로 인해 2021년 5,477억유로에서 2022년 4,430억유로로 19.1% 감소 할 전망
 - (교통·디지털인프라) 2022년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54억유로 (13.0%) 감액된 360억유로 배정
 - 감소분의 대부분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 보상이 2022년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기인
 -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수로 및 철도부문 프로젝트의 일회성 강화조치 및 철도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6.5억유로)를 포함하여 연방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운송부문 투자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교통네트워크 및 유지·개발 투자에 연간 180억유로 이상을 계획
 - (사회보장·고용) 연방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영역인 사회지출은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2023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 2024년 이후에는 다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지출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하락(2017년: 51.0%→2020년 49.4%)하다가 2021년 52.0%, 2022년 48.7%을 기록한 후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5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2022년 노동사회부(BMAS) 예산은 전년대비 1.2% 감액된 1,630억유로 편성
 - 가장 큰 지출인 연금급여 지출은 2022년 1,080억유로 규모이며, 연금기여율은 2022년 18.6%, 2023년 18.7%, 2024년 19.7%로 증가할 전망
 - 2022년 노동부문에 대한 연방지출은 438억유로로 배정되었으며, 실업급여(SGB II)⁹⁾ 224억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 및 난방비 101억유로, 구직자 관련 고용서비스 및 행정비용 부담 99억유로, 노동시장으로의 난민

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크게 증가했던 실업급여 예산(344억유로 편성)은 2022년부터 실업자 수 감소 전망으로 큰 폭 감액

편입 3.45억유로 등으로 구성

- 2022년 사회보장기여금을 40%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기금에 70억유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매년 10억유로를 기여할 계획
- 2022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 감액된 124억유로 규모이며, 부모수당과 양육비 선지급금¹⁰⁾이 76.3억유로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별기금을 통해 초등 중일돌봄을 위한 투자에 총35억유로를 제공
- (교육·연구) 교육연구부(BMBF) 예산안은 2022유로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편성
 - 2022년에는 총 92억유로가 연구 프로젝트 자금에 사용될 계획이며, 연구 및 교육강화, 대학교육 혁신, 우수대학육성전략(Exzellenzstrategie)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글로벌 과제를 다루는 연구에도 중점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혁신협약(Paktes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예산을 매년 3%씩 증액(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 부담)
 - 연방교육지원법(BAföG)¹¹⁾에 따른 지출은 약 21억유로로 추산되며, 교육 부문에서는 직업훈련 현대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이후 캐치업 프로그램, 고급교육 지원 등에 중점을 둠
- (경제협력·개발) ODA 지출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개발부(BMZ)의 2022년 예산안은 108억유로 규모이며, 추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및 국제기후 관련 대응 조치를 위한 부처의 요구에 따라 20억유로 지출이 가능
 - OECD 2020년 잠정집계에 따르면 독일은 ODA에 약 250억유로(GNI 대비 0.66%) 규모를 지출했으며, 이는 DAC 회원국 중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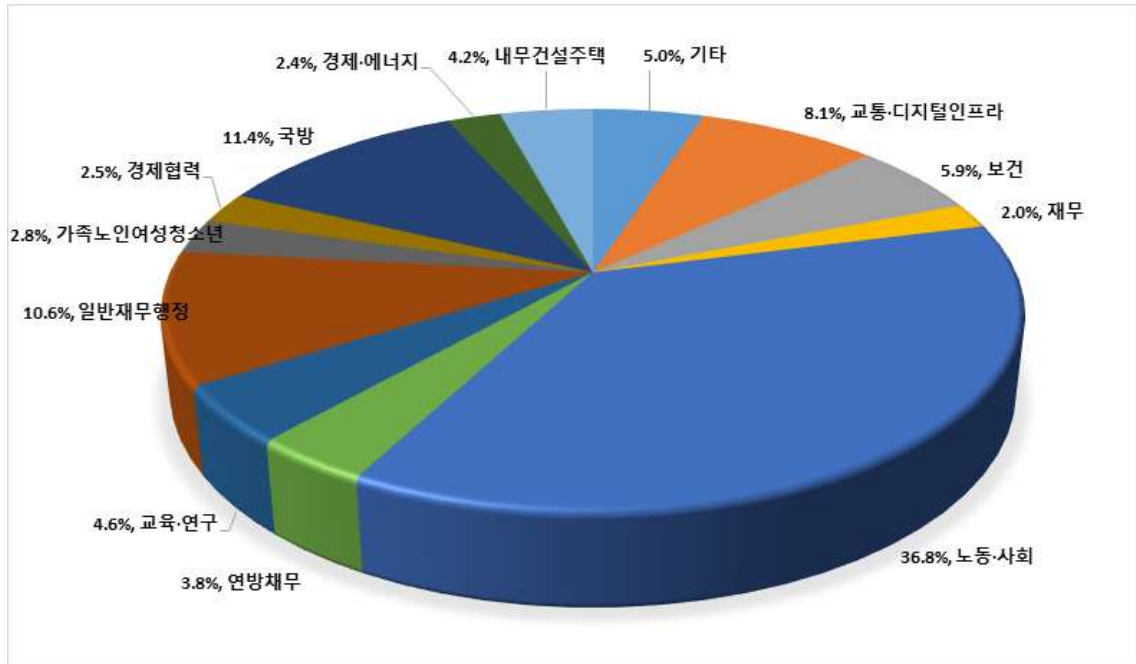
10)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정책으로,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11) 독일은 모든 구성원이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지원법을 통해 교육기간 교육과 생활전반을 위한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연방교육지원법은 독일 정부가 학생과 대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가정형편과 필요를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교육/생활지원금을 규정.(한국법제연구원, 2019)

- (보건) 2022년 보건부 예산안은 팬데믹 대응 축소로 전년대비 대폭 감액(47.5%) 되어 262억유로 편성
 - 코로나 대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백신조달을 위한 연방보조금(19억유로) 및 건강기금에 대한 추가 연방부담 확대(70억유로) 등이 여전히 우선순위로 편성됨
 - 2022년 최초로 연방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정액 기여금 예산 편성(10억유로)
-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2년 환경부 예산은 전년대비 0.9% 증액된 27억유로로 편성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를 위한 국제기후금융에 약 6억유로 편성
 - 유럽 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Europäischen Klimaschutzinitiative)¹²⁾에 2천만유로, 2022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6천만유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에 4천1백만유로 지출 계획 등
- (경제·에너지) 2022년 경제에너지부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2.8% 증액된 106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에너지전환, 지역경제발전에 중점
 - 에너지전환에 2021~2025 기간 동안 총 54억유로 지원,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2021~2025 기간 동안 35억유로 제공), 해양·항공 관련 연구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지원 확대
- (국방) 2022년 국방부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유로 증액(7.2%)된 503억유로로 편성
 - 경제·미래패키지의 조달 및 디지털화, 디지털 연구센터를 위한 재원 약 12억유로 포함

12)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동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펀드 재원은 배출권 거래의 경매수익 및 환경부(BMU)의 예산으로 구성되어있음. 국제기후보호 기금은 2019년 2,000만유로에서 2021년까지 5,000만유로까지 확대할 계획

[그림 3] 2022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p.21, 2021.8.

<표 6> 2020-2025 주요 기능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0 실적	2021 목표	2022 예산안	2023	2024	2025
사회보장	233,312	302,307	218,090	205,142	210,671	214,060
국방	40,112	40,822	44,091	41,012	40,772	40,263
식품·농업·건강	2,173	3,333	3,010	2,741	2,545	2,358
경제·에너지	6,505	16,165	17,354	18,341	14,039	11,414
교통	28,061	28,853	32,991	30,740	30,540	31,571
건설·도시개발	1,621	2,831	3,351	3,561	3,601	3,429
교육·과학·연구	24,206	26,905	26,144	24,621	24,638	24,012
문화	3,974	4,313	3,081	2,920	2,942	2,950
환경보호	2,135	4,982	2,599	2,553	2,500	2,519
스포츠	430	484	303	269	253	252
내무·이민	8,231	9,357	9,612	8,828	8,704	8,605
경제협력·개발	12,127	12,324	10,795	9,830	9,654	9,551
일반재무	16,183	20,060	23,751	24,188	25,533	25,063
특별기금	29,387	2,529	5,883	3,202	2,757	2,497

주: 2023~2025는 전망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Tabelle 5., p.22-23

<표 7>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1 (A)	2022 정부안 (B)	증감률(%) [(B-A)/A]
대통령실	44.65	44.47	-0.4
연방하원	1,059.76	1,072.25	+1.2
연방상원	41.19	38.25	-7.1
총리실	4,647.72	3,628.81	-21.9
외무부	6,301.73	6,212.63	-1.4
내무부	18,457.71	18,774.78	+1.7
법무부	957.46	965.09	+0.8
재무부	8,742.34	8,699.03	-0.5
경제에너지부	10,273.53	10,561.52	+2.8
식품농업부	7,676.08	7,261.27	-5.4
노동사회부	164,920.48	162,992.87	-1.2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41,354.47	35,958.84	-13.0
국방부	46,930.01	50,330.49	+7.2
보건부	49,896.42	26,189.70	-47.5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2,657.06	2,681.73	+0.9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3,206.59	12,434.44	-5.8
헌법재판소	37.17	35.91	-3.4
회계감사원	168.88	172.99	+2.4
정보보호 및 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31.54	31.71	+0.6
독립통제위원회	4.69	12.49	+166.3
경제협력개발부	12,425.68	10,838.01	-12.8
교육연구부	20,819.43	20,212.14	-2.9
연방채무	15,273.60	16,755.62	+9.7
일반재무관리	121,797.53	47,074.98	-61.3
재정지출	547,725.71	442,980.00	-19.1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p.85

4. 주요 정책

가. 재정건전화 계획

1) 2021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1)¹³⁾

- 독일은 2021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1)을 통해 2021년 경제성장률은 3.0%,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전망) 독일 경제성장률은 2020년 -4.9%를 기록한 후 2021년 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21년 3.0%, 2022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21년은 민간소비, 장비투자, 무역, 정부소비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2023-2025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2%가 될 것으로 예측
 - (재정전망) 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년 GDP 대비 -9%까지 하락한 후 2022년부터 적자폭이 감소하여 2025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채무) 독일의 마스트리히트 기준 채무 비율은 2021년 GDP 대비 74.5%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 GDP 대비 69.25%를 나타낼 전망
 -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 GDP 대비 75.25%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낮은 69.8%를 기록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낮은 수준임(G7 중에서는 가장 낮음)
 - (재정정책 방향) 독일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은 성공적이며, 향후 연방정부의 목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및 기업을 지원하며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원조 프로그램 시행 및 미래를 위한 투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3) 독일 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1.4.2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4/2021-04-21-deutsches-stabilitaetsprogramm-2021-beschlossen.html>, 검색일자: 2021.4.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1.7.참고

경제와 행정의 현대화 및 독일 경제의 잠재력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표 8> 2020-2025년 독일 경제·재정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전망(단위: %)						
실질GDP성장률	-4.9	3.0	2.6	1.2	1.2	1.2
민간소비	-6.1	3.6	2.9	1.2	1.2	1.2
정부소비	3.3	1.1	0.5	1.0	1.0	1.0
총고정자본형성	-3.1	3.6	3.5	1.7	1.7	1.7
수출	-9.4	6.4	5.7	3.1	3.1	3.1
수입	-8.5	7.2	6.0	3.6	3.6	3.6
재정전망(단위: GDP 대비 %)						
총수입	46.9	45.75	46.25	47	47.25	47.75
총지출	51.1	54.75	49.5	48.5	48.25	47.75
일반정부 재정수지	-4.2	-9	-3	-1.5	-0.5	0
구조적 재정수지	-2.0	-7.75	-2.75	-1.25	-0.5	0
총채무	69.8	74.5	74	73.25	72	69.25

자료: 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1, Tabelle 11,12,13,15,18. 주요 변수 발췌, 2021.4.21.

[그림 4] 실질GDP 추이 및 전망



자료: Deutsche Stabilitätsprogramm 2021, Abbildung 1., 2021.4.21.

- 이후 독일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제23차 회의(2021.6.21.)¹⁴⁾를 통해 경제 및 재정전망이 다소 신중하게 예측된 것으로 정부 전망에 비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¹⁵⁾
- 독일 정부는 2023년부터 연간 약 20억유로의 상환 의무를 시행할 계획으로 2026년부터 상환 금액은 연간 약 205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과차입금 상환은 2042년에 종료될 예정¹⁶⁾
 - 2023년 시작되는 상환 의무는 2020년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예외적인 비상상황에 대한 부채 브레이크 중단(기본법 제115조 제2항 제7문)을 적용함으로써 발생
 - 독일 정부는 2022년 예산안 편성시 예외적 비상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허용되는 신규부채를 약 984억유로 초과하는 997억유로의 신규차입을 편성하여 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결의가 필요
 - 다만, 2022년 신규차입은 약 2,402억유로의 신규차입이 계획되었던 2021년에 비해 절반 이하 규모로 편성

2) 수정 중기재정계획(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¹⁷⁾

*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예산계획(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독일은 6월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에 현재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여 제출함.

- 독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1년 -7.25%를 기록한 후 2025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 또한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GDP 대비 72.25%)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14)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6/2021-06-21-stabilitaetsrat-23-sitzung.html>, 검색일자: 2021.6.28.

15) 제23차 회의관련 주요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1.7.참고

16) 독일 재무부, Bundeshaushalt 2022, 2021.6.
Finanzbericht 2022, 2021.8.

17) 독일 연방정부,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information-material-issued-by-the-federal-government/german-draft-budgetary-plan-2022-1968494>, 검색일자: 2021.10.21.

- (재정수지)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1 안정화프로그램(-9%) 대비 개선된 -7.25%로 전망되며, 2022년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3.25%를 기록 한 후 2025년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2021년 안정화프로그램 대비 재정적자 개선은 세수 증가 및 홍수피해 재건을 위한 기금(Aufbauhilfe 2021)으로의 자금할당이 2021년의 수입으로 기록된 것에 기인
 - 2022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주로 기업에 대한 코로나 관련 지원 및 기타 팬데믹 대응 추가지출의 만료로 인한 것이며, 안정화프로그램 재정수지 전망(-3%)보다 악화된 요인은 연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적자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중기재정목표; MTO) 독일의 중기재정목표인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0.5% 달성은 2024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 GDP 대비 -6%를 기록 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마스트리히트 기준)는 2021년 72.25%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GDP 대비 67.25%로 전망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2019년 58.9%→2021년 72.25%)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2008년 65.7%→2010년 82.0%)에 비해 양호할 것으로 예측

<표 9> 2021~2025 독일 중기재정계획 주요 지표 변화

	(단위: GDP 대비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정부 재정수지(2021.10)	-4.3	-7.25	-3.25	-1.5	-0.5	0
일반정부 재정수지(2021.4)	-4.2	-9	-3	-1.5	-0.5	0
구조적 재정수지(2021.10)	-1.8	-6	-3.25	-1.5	-0.25	0
구조적 재정수지(2021.4)	-2.0	-7.75	-2.75	-1.25	-0.5	0
국가채무(2021.10)	68.7	72.25	71.25	70.5	69	67.25
국가채무(2021.4)	69.8	74.5	74	73.25	72	69.25

주 1: 2021.4월 자료는 안정화프로그램 2021(Stabilitaetsprogramm-2021) 기준

2: 2021.10월 전망 자료는 2021.9.24. 시점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15.

나. 기후변화 대응

1)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Klimaschutz-Sofortprogramm 2022)

□ 독일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중점 투자 항목으로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추가로 80억 유로를 배정함

○ (배경) 독일 연방내각은 2021년 5월에 탄소중립 달성시기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은 기후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채택한 바 있음¹⁸⁾

○ (내용)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연방내각은 지난 2년간 기후보호 및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추가로 80억 유로를 배정하기로 결정

- 2022 기후보호 프로그램에는 건물, 교통 및 산업과 같은 부문별 및 포괄적 조치들이 포함됨

· (건물) 2025년까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 개조, 기후친화적인 신축, 사회주택 개조를 위해 55억 유로 추가 배정

· (교통) 자전거 도로 확충, 철도 디지털화, 신규 고속충전소 설치, 수로 및 기후친화적 운송에 10억 유로 이상 투입

· (산업) 기후친화적 제품생산에 드는 추가 비용 지원, 철강 산업의 수소전환·화학 산업을 위한 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산업 지원에 8.6억 유로 지원, 산업 탈탄소화 프로그램에 6.5억원 추가 지원

· (기타) 국가 수소전략, 난방 네트워크 확장 등을 위한 에너지부문 추가 투자, 농업 및 저배출 저장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촉진, 기후친화적 농업부문을 위한 추가 자금 배정, 재생에너지(EEG) 부담금 축소를 포함한 부담금 및 세금의 포괄적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참고

2) 에너지·기후기금(Energie- und Klimafonds; EKF)

- EKF는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보호를 위한 자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특별기금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신뢰할만하며, 적정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촉진하고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금을 제공
- (수입) 2021년 대비 탄소배출권 수입 및 연료배출거래 수입, 연방정부 지원금이 증가할 전망이나 준비금이 감소하여 2022년 EKF 수입은 약 342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22년 프로그램 지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21년(265억유로) 대비 약 10% 초과한 293억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그램 지출: 전기가격 인하 보조금 78억유로, 건축부문 연방자금 지원 78억유로, 환경보너스 21억유로, 충전인프라 확충 17억유로, 산업부문 탈탄소화 12억유로, 배터리셀 생산 촉진 7.25억유로 등

<표 10> 2021~2025년 에너지·기후기금 계획

(단위: 십억유로)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42.695	34.183	22.162	20.700	22.899
탄소배출권 수입	2.745	3.466	3.585	4.984	5.104
연료배출거래 수입 ¹	7.413	8.672	10.493	13.009	15.348
연방정부 지원금	2.479	5.833	3.152	2.707	2.447
준비금	30.057	16.211	4.933	0	0
지출	42.695	34.183	22.162	20.700	22.899
프로그램 지출	26.494	29.250	23.332	22.168	21.513
준비금	16.211	4.933	-	-	1.385

주: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통해 난방, 운송연료 등 EU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배출권 인증서의 형태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연료배출권 거래법(BEHG)이 2021년부터 시행,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2020.11.13.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2022-und-finanzplan-2025*, p.45., Tabelle 8. 주요 변수 발췌, 2021.8.

다. 주요 투자 정책

- 2022년 연방예산의 투자 지출은 전년도 목표인 약 593억유로 보다 낮은 약 518억 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중기재정 기간(2023~2025) 동안 연간 약 510억유로 규모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
 - 이는 2024년까지의 이전 재정계획에서의 투자 보다 총 122억유로가 더 높은 수준이며, 교통 인프라, 주택, 교육·연구, 디지털화, 환경보호, 개발원조 등에 우선 순위로 재원 배분
 - (교통) 독일 연방정부는 도로(84억유로), 철도(93억유로), 수로(14억유로)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자금(10억유로) 등 교통 인프라에 가장 많은 투자 재원을 배분
 - (개발원조) 2022년 BMZ(경제협력개발부)에 속한 개발원조를 위한 프로그램 투자지출 74억유로 편성
 - (주택) 사회주택 보조금(10억유로), 환경 친화적 사회주택을 위한 프로그램(10억유로), 도시 개발 촉진(11억유로) 등
 - (교육·연구) 대학 내 연구 건물, 대규모 장비 및 고성능 컴퓨터 자금 지원(3억 17백만유로), 우수대학육성전략(4억유로), 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¹⁹⁾(18.8억유로) 등
 - (환경보호)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공공투자는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연방 지출은 일부에 불과
 - 방사성 폐기물 관련 부지선정(6.45억유로),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소(3.78억유로),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해외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재원)(5.98억유로) 등
 - 에너지·기후기금,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연방정부의 특별기금 또한 2022년에 약 194억유로의 투자지출을 계획

19) Zukunftsvertrag Studium und Lehre stärken(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은 2019년 연구와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학업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패키지를 승인